



주간통일정세 2008-28(2008.07.07~07.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김일성 묘소 참배(7/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일 김일성 주석의 14주기(周忌)를 맞아 북한군 간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동행한 군대의 지휘 성원들과 함께 김일성 동지께 경의를 표했다”며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김 주석의 96회 생일을 맞아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했으나, 기일을 맞아 참배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2005년 7월 이후 3년만임.

나. 정치 관련

● 北, 李대통령 시정연설 “일고의 가치도 없다”(7/1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노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 남북관련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아래 것들이 떠들어오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 제하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6·15 및 10·4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가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북남합의들과 뒤섞어 어물쩍하여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오히려 “(6·15 및 10·4)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남선언들과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느니 뭐니 했는데 실천방도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선언을 제쳐놓고 또 무슨 협의가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박하고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서툰 말장난을 그만 두고 온 민족앞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북남선언들을 뒤집어엮고 6·15이후 북



남사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백지화하며 북남관계를 만 데로 끌고 보려는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실천의 시대’를 떠드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주장

- 이어 이 대통령이 한 “북의 비핵화 최우선”,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 등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의 주장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며 “범죄적인 비핵·개방·3000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다 악랄하게 추구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결국 괴뢰역도가 이번에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운운하였지만 그것은 속에 없는 빈말이며 그들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더욱 더 악랄하게 도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이명박 역도의 반통일적 입장과 대결적 정체가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고 주장

● 北, 금강산관광, 남북 화해에 큰 기여(7/13,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13일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관광의 의의와 성과를 “금강산관광은 북남 경제협력의 대명사로 민족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게 됐으며,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 매체는 이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온 자랑찬 역사’라는 기획 시리즈 40회로 ‘뜨거운 사랑 속에 열려진 금강산 관광길’이라는 글을 싣고 금강산관광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관심 속에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이번 피살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매체는 “세계의 명승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 모두가 와보게 해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이었다며 1998년 11월 첫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는데 이어 6·15공동선언 채택으로 관광이 더욱 확대됐다고 보도, “금강산을 단순히 관광을 위한 금강산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를 잇는 무지개다리, 온 민족이 만나는 통일오작교로 되게 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도였고 “(김 위원장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금강산관광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됐다”고 설명
-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또 “남쪽에서 자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구태여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는 원칙에서의 상호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두 제도가 존재하는 기초 위에서 공존, 공영, 공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남쪽에 강요하거나 먹이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현대’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김 위원장은 이어 2005년 7월16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만나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현대)가문은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며 “나는 북남관계에서 ‘현대’가 그 어느 기업보다 모범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언급

● **김정일, 조부 묘에 화환(7/1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형직의 114돌 생일에 즈음해 10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는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기남 당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광범기·태중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사회민주당 위원장 등도 화환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노동신문, ‘南에 남북관계 위기 책임’ 주장(7/8, 노동신문)**

- 8일 김일성 주석의 14주기를 맞아 게재한 장문의 사설에서 “조국 통일은 김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에 대한 투쟁을 주장
- 신문은 ‘우리 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공공연히 거부하면서 북남관계 발전을 엄중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으로 틀어쥐고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

● **北 김일성 14주기 맞아 ‘영도업적’ 찬양(7/7,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4주기(8일)를 맞아 각종 회고모임과 기념 행사를 진행하며 그의 ‘업적’ 찬양에 각종 매체를 동원, 북한 매체들은 김 주석의 ‘영도 업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영생하는 김일성 동지의 뜻을 받들어” ‘유훈 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도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채권가격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7/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거래되는 북한의 채권 가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방송은 현재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 1달러당 25센트인데 이는 6개월전 1달러당 32센트에 비



해 20% 떨어진 것이라고 보도

- 방송은 “서방은행들은 북한에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돈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1994년부터 채권을 만들어 팔았다”며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모두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北내각, 상업회의소 규정 채택(7/7,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이 최근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민주조선을 인용, “이 규정에는 상업회의소의 사명과 대외경제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상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소개했지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통신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 무역촉진단체와 교류,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2000년 평양상업회의소를 설립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가입했으며 2005년부터 ‘조선상업회의소’라는 새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 채택은 그동안 활동해오던 상업회의소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라. 사회·문화 관련

● **사리원·청진 당일 최고기온 경신(7/9, 조선중앙TV)**

- 북한에서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9일 황해북도 사리원이 33.6도, 함경북도 청진이 31.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이래 당일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조선신보, 北장애인기구, 세계농아연맹과 교류(7/9,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6월 세계농아연맹(WFD) 대표단을 처음으로 초청해 농아 교육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세계농아연맹 대표단은 북한의 농아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흥농아학교, 성천농아학교, 강원도농아학교도 방문
- 조선신보는 한편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조선장애자 예술협회와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하고 북한 전역의 특수학교에서 시험을 치러 예술과 스포츠에 소질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 프로복싱, 6년 만에 해외 원정(7/8, 연합)**
 - 프로복서 김이현(29)은 16일 태국에서 범아시아복싱협회(PABA) 플라이급 챔피언 라타노폴 소보라핀(33.태국)과 타이틀매치(11R)를 진행, 여자 복서 박영화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우사나콘(태국)과 PABA 여자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결정전에 나섬.
 - 북한은 평양, 금강산 등지에서 수차례 남북 프로복싱 대회를 개최, 이 때 최은순(28)과 류명옥(25), 김광옥(30) 등이 세계복싱평의회(WBC) 여자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지만 해외 방어전을 치르지 않아 '삼일천하'로 끝나곤 했었음.
 - * 북한은 1992년 7월 북한 프로권투협회를 설립했고, 1995년 WBC와 1997년 세계복싱협회(WBA)와 PABA에 잇따라 가입하면서 세계 프로복싱계에 모습을 드러냄.

- **평양, 옥류약수 위염·간염 치료에 효과(7/7, 조선신보)**
 - 7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옥류관 부근에서 샘 솟는 옥류약수는 물맛이 좋을 뿐 아니라 몸에 좋은 각종 성분이 들어 있어 '무병장수의 음료'로 통한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10월까지 경제보상, 무력화 병행(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베이징에서 6자 수석대표회담(7.10-12)이 열린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북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5자가 10월까지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경제보상을 완결하는 데 병행해 무력화(핵 불능화)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2007년 10.3합의 이행 정형(실태)을 평가하고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합의가 이룩됐으며 보도문이 채택됐다”면서 6자 언론발표문 내용에 대해 언급, 통신은 또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 틀거리 안에 각 측의 의무이행을 검증하는 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조선신보, 北 3단계 대비 비핵화 검증원칙 주장(7/13, 조선신보 인터넷판)**
 - 북한 대표단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7.10~12,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했다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
 - 조선신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선(북한)은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검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즉,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 그 필요성과 당 위성을 주장했다”고 보도

- 신문은 “조선측이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검증논의는 10·3합의 이행 완결을 다그쳐야 할 시점에서 당장 착수할 과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조선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체제의 구축과 직결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제3단계(핵폐기) 문제 토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
- 신문은 이번 회담 언론발표문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계 수립에 합의했다”면서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검증체제를 내놓게 됐다”고 평함.
- 마지막으로 신문은 결국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기초해 조·미를 포함한 6자의 ‘행동 대 행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분석
- 아울러 “일본은 이번 단장회의에서도 6자 합의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일) 교착 타개의 계기점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난

● 6者, 불능화·에너지지원 10월까지 완료에 합의(7/12, 연합)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12일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 현안인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와 함께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 체제를 수립하기로 결정
- 하지만 당초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 검증에 착수하는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음.
-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함.
-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은 사흘간 진행된 6자 수석대표회담을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언론발표문은 서문과 6개 항목으로 구성

● **한·미·일, 6자 수석회담(7/10, 연합)**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 수석대표회담 개막을 앞두고 10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만나 회담 전략을 조율, 한·미·일 수석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8~9일 진행됐던 북·미, 남·북, 한·미 양자접촉 결과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한편 검증체계 구축, 6자 외무장관회담 일정 등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美 6자회담 수석, 베이징서 회동 (7/8, 연합)**

- 북한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본격 양자회담을 갖고 10일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의의 의제 등을 사전 조율,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8일 오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회동, 북핵 신고서 검증 방안 등 차기 회담의 의제를 논의

나. 북·미 관계

● **美, 北에 한미합동 군사연습 항의(7/10,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군은 10일 판문점에서 미군측과 대령급 접촉을 갖고 최근 미군 측이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 북한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행위”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이들 방송은 “미군 측이 우리 측이 제기한 사건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게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우리 측은 미군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언급
- 방송은 이어 북한군의 판문점대표부 곽영훈 대좌(대령)가 “미군 측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대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도발자들에게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美조지아대, 北농대생 유학 추진(7/1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조지아대학이 북한의 농과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대학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



- 스캇 앵글 조지아대 농대학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4일간 방북해 농과대학 학생들을 미국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북한 관계자들과 논의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식량난을 단순히 농작물 증대라는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농업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장기적 목적”을 갖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앵글 학장은 조지아대가 북한의 농과대학에 실험기재와 연구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美 대북협상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7/11, 연합)**

-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할 대북 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승진, 내정한 것으로 8일 알려짐. 이에 따라 성 김 과장은 곧 대북 협상특사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한국과장은 커트 통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담당 보좌관이 맡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발표

다. 북·중 관계

● **北·中, 상호원조조약 기념연회 개최(7/11,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7돌을 기념한 연회가 10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회가 마련한 이 연회에는 상하이밍(邢海明) 임시 대리대사를 포함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초대됐고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과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상호원조조약에서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면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자동개입 의무를 규정

라. 북·러 관계

● **北, 러시아 지원식량 신의주 도착(7/8, 평양방송)**

-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7일 열차편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8일 보도, 방송은 이번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의 표시로, 우리 인민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언급
-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6월 18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나섰다면서 “밀가루 2천860t이 6월 11일부터 북한으로 운송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WFP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



마. 북·일 관계

- **日외상, 북에 ‘6자 합의 기만 말라’ 경고(7/13, NHK)**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13일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최근 6자회담 결과와 관련, 북측에 이번 합의를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 고무라 외상은 “원하는 것을 얻은 반면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큰 실수”라고 강조

바. 기타외교 관계

- **北 교향악단, 9월 영국 공연(7/11, 미국의소리방송)**
 -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7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감리교도 중앙홀에서 공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을 추진중인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씨는 160여명으로 이뤄진 악단이 9월 15일 런던에 도착해 17일 공연을 갖고 19일엔 영국 북동부의 소도시 미들즈브러에서 또 한차례 공연한다고 설명
- **北 신선호 유엔대사, 캐나다 대사 겸직(7/6, 평양방송)**
 -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가 미카엘 장 캐나다 총독에게 6월 30일 신 임장을 제정했다고 평양방송이 6일 보도

3. 대남정세

- **정부, ‘금강산피살’ 합동조사단 구성(7/13, 연합)**
 - 정부는 13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함. 합동조사단은 금명간 제1차 회의를 개최,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
- **금강산 체류 관광객 13일 전원 귀환(7/13, 연합)**
 - 금강산에 체류 중인 남측 관광객 350명이 관광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환함에 따라 금강산에 있던 관광객 전원이 철수함. 현재 금강산에는 남측 사업자와 현대아산 직원 등 1천500여명이 잔류하고 있으며 현대아산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일부 직원의 철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
 - 반면 개성관광의 경우 7월 12일 532명이 들어간 데 이어 13일도 동수의 관광객이 버스편으로 방북 길에 오름. 통상 개성을 방문할 수 있는 1일 관광객은 최대 560명 수준인데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예약 취소가 별로 없이 거의 만석을 기록 중임.

●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발표(7/12, 연합)**

- 북한의 금강산관광 사업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에 “유감”을 표시했으나 우리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현장 조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피살된 관광객이 자신들의 군사통제구역에 침범한 점을 지적, 책임을 남측에 넘기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함.

● **李대통령, 北에 “전면적 대화하자” 제의(7/11,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개인 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
-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또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

● **50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7/11, 연합)**

- 7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금강산 특구내 골프장 인근 해변가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여·53·서울 노원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짐. 당국과 현대아산측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새벽 금강해수욕장에서 고성읍쪽으로 해변을 따라 1km정도 걸어가다 민간인통제구역 울타리를 넘어가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박씨는 걸어가는 과정에서 첫번째 북한군 초소는 그냥 지나쳤으나 두번째 초소에서 피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은 “박씨가 수차례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와 사격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샘복지재단, 北에 의약품가방 1만개 전달(7/10, 연합)**

- 기독교 국제의료 지원단체인 샘복지재단(대표 박세록)이 8월 4일



부터 두달간 42억원어치의 의약품을 담은 ‘사랑의 왕진가방’ 1만 개를 북한에 보냄. 이 단체는 10일 ‘2008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의 세계의료선교회로부터 기증받은 4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포함한 기초 의약품을 부산과 중국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보고

● 2009년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편성(7/10 연합)

- 통일부가 최근 마련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쌀과 비료 지원량으로 통일부는 2008년도 대북 쌀·비료 지원량을 각각 40만과 30만으로 책정,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된 지원 예정량보다 각각 10만씩 줄어든 것으로, 2007년 수준이지만 국제적인 곡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물량임.

● 개성공단 北근로자 3만명…숙소문제 시급(7/9, 연합)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수가 최근 3만명을 돌파하면서 작년 남북간 합의 사항인 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72개 업체에 3만84명에 달하며 올해 말이면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개성과 인근 지역 주민들로, 88대의 통근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통근버스를 100대 추가 투입하기로 해 한동안 근로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내후년까지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이미 분양 받은 업체들이 입주를 포기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들은 우려
- 남과 북은 2007년 1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 숙소를 건설키로 했음. 당시 양측은 2008년 초 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착공키로 합의했지만 대화가 중단되면서 숙소 부지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임.

● 남북, 경의선열차 1주간 운행않기로(7/7, 연합)

- 남과 북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일(8일)을 즈음해 7~11일 문산-봉동간 경의선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발표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김주석 애도기간(7~9일)을 즈음해 철도 운행을 5일 정도 휴무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양측은 7일 운행 중단에 들어가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



〈첨부 1〉 ‘금강산 피살’ 정부 성명[전문]

『정부는 우리 측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측에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응당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비극을 방치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은 이미 출입·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할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북측도 관광객으로 간 평범한 여성이 자기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만큼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07/03



〈첨부 2〉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전문]

『남조선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11일 새벽 4시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고 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 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까지 들어온 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남조선 관광객은 신새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 울타리를 벗어나 신발을 적시면서 혼자 우리 군사통제구역 깊이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도록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고 경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사고 발생시 현대측 인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07/12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6者, ‘테러국해제’前 검증방안 확정 추진(7/13)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7.12합의’ 내용을 보다 실천적 방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로 비핵화실무회의를 개최할 방침.
- 6개국은 또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수석대표회담도 개최해 합의 수준을 격상하는 등 8월 11일인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까지 검증 방안 마련과 실제 검증 착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음.
- 미국은 특히 검증체제 구축과 관련, 7.12합의에 규정된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외상, 북에 ‘6자 합의 기만 말라’ 경고(7/13)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NHK 방송에서 “제재 조치는 해제될 수도 있고 다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내가 북한 사람들에 말하려는 것은 미국을 크게 얕잡아 보거나 욕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라는 또 “원하는 것을 얻은 반면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 고무라는 가장 최근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를 검증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 엄밀한 토론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3단계 대비 비핵화 검증원칙 주장”<조선신보>(7/13)

- 북한 대표단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7.10~12,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
- 조선신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선(북한)은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검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즉,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 <6자회담> 러시아 “결과 그리 나쁘지 않아”(7/13)

- 러시아는 9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번 제6차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12일 보도
-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증 체제 마련 논의는 쉽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검증계획과 이행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 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이날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는 회담 결과를 전했다. 통신은 이번 협상으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100만톤의 에너지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시한을 설정하고 검증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도출했으나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과 검증 착수 시점 등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도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 <6자회담> 美언론 ‘제한된 진전’ 평가(7/13)

-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검증체제에 합의하고,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의 시한을 정하는 등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
- 하지만 북핵 신고 검증의 세부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등 ‘제한된 진전’에 그쳤으며, 이는 굴곡을 거듭해온 북핵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신문은 지적
-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이날 6자회담 결과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오래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제를 남겨줬다고 전했다.
- AP통신도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영변핵시설의 10월 내 불능화를 명시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 북핵 해결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비핵화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힐 “8월11일前 북핵 검증 착수”(7/12)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발효(8월11일)되기 전에 북한 핵 신고내용의 검증에 착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종료



된 뒤 숙소인 중국대만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11일 이전에 검증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6者, 불능화·에너지지원 10월까지 완료키로(7/12)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12일 사흘간 진행된 수석대표회의와 실무회의를 결산하면서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 검증체제 마련과 관련,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되는 감시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 참여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 <6자회담> 10.3합의 마침표..‘검증’단계 시동(7/12)

- 9개월여만에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제6차 6자 수석대표회의는 합의문 성격의 언론발표문을 통해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납치문제로 지원에 불참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한·미·중·러의 지원 일정까지 명시했다. 여기에서 북한의 핵신고에 따른 검증체제 수립과 관련,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필요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 등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음. 또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를 염두에 둔 ‘감시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 수석대표로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적절한 당국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회담을 ‘검증 회담’이라고 규정할 만큼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회담의 가장 큰 과제였다는 점에서 검증의 원칙적 틀을 마련한 것은 적지않은 성과로 평가됨.

● 김숙 “검증 대상은 北신고서”..한반도전역 검증 부인(7/12)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된 검증은 “26일 신고된 북측의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언론발표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한다’는 문구가 남북동시사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9.19공동성명의 궁극적 목표와 10.3합의의 2단계 목표에 따른 검



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 제공과 관련, “자문과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고 추후 필요한 때라고 명시했다”며 “검증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될 것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 김 본부장은 6자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그동안의 합의에 비하면 늦었다는데 대해 공동의 인식이 있었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시기는) 각측 마다 일정이 있어서 다 확인하기 어려웠고 6자 외교장관회담도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장소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중국과 나머지 나라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신고서 검증, 美 적대정책 철회 보증해야” <조선신보>(7/12)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북한의 핵신고서 검증 착수시기와 관련해 “미국과 교전관계에 있는 조선(북)이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전환, 군사적 위협의 제거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핵시설 무력화(불능화)나 핵신고서의 제출, 그에 대한 검증은 모두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이라며 “과거 ‘핵사찰’을 조선의 무장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획책한 바 있는 미국이 앞으로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데로 계속 나간다는 명백한 보증을 주지 않는 채 핵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권한부터 받으려 한다면 너무나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음.
- “부시 정권에는 대조선 외교를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3합의 이행 완결 후 시작될 ‘다음 단계’의 문제에 현 정권이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지도 확실치 않다”면서 “10.3합의 이행의 마무리 국면에서도 핵심은 호상(상호) 검증, 감시를 받게 될 조·미의 의무이행”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 “북핵검증 보고서 14일 美의회 제출” <VOA>(7/12)

- 미국 국무부는 오는 14일 의회에 북핵 검증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
-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30일 발효된 ‘2008 추경예산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법안 발효 후 15일 이내 국무장관이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음.
- 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는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함께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한 북핵과 합의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 中, 6자회담 폐막시 합의문 발표 추진(7/11)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6자 수석대표 회담 이틀째인 11일 참가국들이 회담 폐막 후 공동의 인식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수석대표 회담이 끝나는 내일 회의 결과를 하나의 문건에 담기 위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회의가 끝나고 공동문건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모으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음.
- 친 대변인은 “6자 수석대표는 이틀간의 회의에서 검증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원칙을 논의해 구체적인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비핵화 실무그룹과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도 각각 개최됐다”고 이틀간의 회의 경과를 소개했음.
- 그는 일본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각국은 경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재 일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북일 관계가 양국간 접촉을 강화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일본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촉구했음.

● 김숙 “대북 중유지원 일본 참여 모색해야”(7/11)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대북 중유 지원과 관련, “일본이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음. 김 본부장은 이날 6자 수석대표회담 이틀째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은 기존 입장대로 납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는 대북 중유 지원에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과거에 있었던 합의문서를 보면 다른 방도를 강구기로 한 것도 있지만 일본이 불참한다고 다른 방도를 강구할 시점이 아니다”며 “그러면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아직은 일본 참여방법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숙 본부장은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회의의 가동과 관련, “의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각국 입장의 공통부분을 찾아서 실무그룹에 토의의 기초로 주었다”며 “각 의제별 공통부분을 회의의 마지막에 나올 그 어떤 형태의 결과문서에 반영하게 될지 여부는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올브라이트 “對北 직접대화가 협상 진전 이뤘” <獨紙>(7/11)**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 협상 진전을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을 주도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11일자 독일 일간지 디 벨트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결국 외교적 해결의 효과를 믿은 온건파가 강경파를 이겼으며 이는 군사적 개입과 전략적 고립화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의 지도부는 대화는 양보가 아니며 직접 대화를 통해서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당시 북미 관계정상화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맞바꾸는 일이 중요해졌을 때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고 진지하게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그는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은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더라도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점에서는 8년 전보다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 **中언론 “6자회담 긍정적 재개” 주목(7/11)**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1일 ‘북핵 회담이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재개됐다’는 제목의 1면 머리 기사를 6자회담 수석대표 6명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신문은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최근 긍정적인 조치가 6자회담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 우 부부장은 “이번 회의는 2단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주유소(희망을 주는 곳의 비유적 표현)이며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회담에 거는 기대를 밝힌 바 있음.

- **<6자회담> ‘일본 변수’ 극복할까(7/11)**
 - 북핵 6자 수석대표들이 북한 핵사고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가이드라인에 의견을 모으고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로 의제를 옮겨감에 따라 ‘일본 변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 합의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자국인 남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북일 양측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요도호 납치범 송환과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음. 북한이 그동안 납치문제에 대해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해 왔던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받았음.

● <6자회담> 태풍의 핵..北 폐기물저장소(7/11)

- 북한이 숨기기 위해 애썼던 폐기물 저장소를 이번 핵신고에 포함 시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11일 “북한이 90년대에는 신고서에도 명기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액체폐기물저장소를 신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과거 북한 핵활동의 진실을 규명하자면 이 시설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음. 외교소식통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세부시설의 검증 문제에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서 내용이 검증 대상이라는 것은 북한도 이해하고는 있다”고 말했음.

● “6자회담국 전부 의무이행 검증해야”<조선신보>(7/11)

-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6자회담에 명시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없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강조.
- 신문은 북한이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로서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10.3합의에 명시된 대조선 에너지지원은 현재 40% 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음.

● 김숙 “검증·감시체제 논의 계속”(7/11)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수석대표 이틀째 회의는 북핵 신고서의 검증과 감시 체제에 관한 논의로 시작된다”고 말했음.
-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숙소인 차이나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마무리짓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다”면서 “수석대표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있게 되면 워킹그룹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사이키 “핵신고서 핵무기 배제에 불만”(7/11)

-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0일 “북한이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핵무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 불만스럽다”고 말했음. 사이키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날 6자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신고서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만을 표출.

- 사이키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각국의 의무 이행을 모니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 “대북 에너지지원 ‘일본몫’ 4자분담 고려 안해”(7/11)

- 10일 개막한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대신 미국이나 한국이 ‘일본 분담몫’을 부담한 뒤 추후 상환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 또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비핵화 2단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핵 2.13합의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것에 맞춰 나머지 5개국은 중유 95만 상당의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자국민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6자회담> 검증엔 공감..에너지 지원이 변수(7/11)

- 10일 개막한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상응조치의 하나인 경제·에너지 지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상. 난항이 예고됐던 ‘핵신고 검증’에 대해서는 참가국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양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8월 11일 이전에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활동도 시작돼야 하며 불능화와 지원이 마무리되는 9월 말까지는 일부 작업도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번 회의에서 조(북)·미 쌍방은 이미 취한 동시행동조치의 실효성을 호상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단계의 마무리와 다음 단계에 관한 6자의 문제토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검증과 핵폐기 논의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

● 김숙 6자무대 데뷔..“책임감 느껴”(7/11)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 회담에 참석한 뒤 데뷔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TV 자료화면으로 보던 전체 회의장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새로운 의무감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라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



는 모든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솔직히 전혀 즐겁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첫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실무적 분위기속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의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각국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바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 6자회담이 주유소(?)..우다웨이 개막 연설(7/10)

- “이번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은 2단계 행동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주유소이자 6자회담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해 나가는 전환점입니다” 10일 북핵 6자회담의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수석대표 회담 개막 연설이었음.
- 우 부부장이 중국어로 발표하고 현장에서 영어로 동시통역된 이 발언은 주유소를 뜻하는 ‘가스 스테이션’(gas station)으로 번역돼 참석자들은 6자회담과 주유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음. 이는 중국어로 주유소(加油站)란 단어가 가진 비유적 의미가 영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음.
- 중국에서 주유소는 ‘힘내라’, ‘파이팅’ 등의 응원구호로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자여우(加油)와 역, 장소 등을 뜻하는 잔(站)과의 합성어로 구성돼 비유적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재충전을 하게 해 주는 곳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中 “2단계 행동계획 이행조치 주로 논의”(7/10)

-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개막하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따르는 2단계 행동계획 이행조치와 절차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오위타이에서 개최되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2단계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며 “각국은 또한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및 감독 체계도 주요 논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회의기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와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회의도 개최해 2단계 행동계획 이행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6자회담> ‘검증-폐기’병행 ‘NK모델’ 등장 배경(7/10)

-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3단계인 핵폐기를 거의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이러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북한의 핵폐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김숙 “회의 첫날은 의제·운영방식 논의”(7/10)

-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개막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첫날 회의가 의제 등에 관해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통한 합의 도출 전망에 관해서는 “교섭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 희망섞인 기대는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미국내 북핵 검증과정 이견 여전” <WSJ>(7/10)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일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 검증 방안을 집중 논의. 미국은 북한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가능한 많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접근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
-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농축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많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에 초점을 맞춘 ‘훨씬 더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검증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이 핵 신고서에서 우라늄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주 간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검증’ 놓고 힘겨루기 돌입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수석대표 중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회담이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검증회담’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북한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과 일본의 지원 참여에 우선적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핵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美 대북협상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7/10)

-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할 대북 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승진, 내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 김 과장은 곧 대북 협상특사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한국과장은 커트 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담당 보좌관이 맡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이날 밝혔다.
- 유리 김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미 7월부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특별보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의회에 파견나갔던



에릭 리처드슨이 배치되는 등 국무부 한반도 담당 관리들이 상당 수 자리를 바꿨음.

● 러시아 외무차관 “북핵검증·대북지원 이견 가능성”(7/9)

-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 수립에 관한 합의사항과 비확산,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 의무사항이 기술돼 있으며 검증체계의 원칙도 적혀 있다”면서 그러나 “핵신고서 검증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지만 “북한에 대한 보상 지원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보로다브킨 차관은 말했다.

● <6자회담> 日, 납치-에너지지원 문제 연계할듯(7/9)

- 일본 정부는 10일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최근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증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의 검증 방법을 포함해 확실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G8정상, 북한에 핵무기 포기 촉구(7/8)

-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들은 8일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프로그램 검증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정상들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북한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속한 불능화,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6자회담의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G8 정상들은 이와 함께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나. 미·북 관계

● “북한내 기독교인 40만명”<기독교단체>(7/11)

-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40만명에 달한다고 국제 기독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이 11일 주장.



-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 단체의 아시아 책임자인 첼링씨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내 기독교 신자 수치를 집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가운데 최소 5만~10만명의 기독교인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이들을 구해 내도록 중국과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외부 세상과 단절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픈 도어즈 인터내셔널이 사용하는 비밀조직망을 통해 식량, 성경, 옷 등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 北통신 “美강경세력, 비핵화 파탄 시도” 비난(7/10)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이 북한의 냉각탑 폭파 등 “성의있는 노력을 심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해당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중앙통신은 이날 ‘비핵화 실현을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논평에서 “시험 원자력발전소(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해 버린 것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보여준 선의의 조치로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판문점 JSA서 무슨 일 있었길래..(7/10)

- 군의 한 소식통은 10일 “북한군이 최근 군정위 회의장에서 책상을 걷어차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남측 관광객들이 북측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가리는 소동을 피워 미군 측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측은 미군 측의 항의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일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얼마 전에는 ‘남측 경비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북측 경비병을 노려보는 등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전했다.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회담에서 광영훈 대좌는 최근 미군 측이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 우리(북) 근무성원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고 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행위들을 매일 같이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전했다.

● 美, 北에 한미합동 군사연습 통보(7/10)

- 북한군은 10일 판문점에서 미군측과 대령급 접촉을 갖고 최근 미군 측이 판문점 회의장 구역에서 북한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행위”를 매일 같이 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



송이 이날 보도. 두 방송은 “우리(북한) 측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해 10일 조(북).미 군부 대좌(대령)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 이들 방송은 “미군 측이 우리 측이 제기한 사건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회담의 성격에 맞지 않게 8월18일부터 22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우리 측은 미군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평양서 쓰촨성 지진 사진전시회 개최(7/12)

- 지난 5월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가 11일 평양의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외무성 등 각 부처 관리 약 100명이 참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자들이 찍은 이 사진 작품들은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구조 및 구호 활동 모습 등을 담고 있음.

● “北김영남 올림픽개막식 참석”<신화>(7/12)

- 내달 8일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예정.
- 상하이밍(邢海明) 북한주재 중국 임시 대리대사는 11일 평양에서 열린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7돌 기념연회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은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 中대사 “北과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조 심화”(7/11)

- 중국의 상하이밍(邢海明) 북한주재 임시 대리대사는 10일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47돌 기념연회에서 “중국측은 조선(북한)측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부단히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싱 대리대사는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서명한 이 조약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물려준 귀중한 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도 연설에서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조중 친선 협조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이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 기타

● 파리에 ‘中 탈북자 복송중지’ 캠페인(7/12)

-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에 반대하는 ‘유럽6개국 일주 자전거 대행진’ 행사단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캠페인을 벌였음.
-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와 팀 피터스 헬핑핸즈(사랑의 손길) 코리아 대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소속 회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의회 주변에 집결,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복송 중지를 촉구했음.
- 서 목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음.
- 지난달 30일밤 브뤼셀을 출발해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을 거쳐 파리에 도착한 행사단은 12일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행사를 마치고 귀국.

● 北 교향악단, 9월 영국 공연<VOA>(7/11)

-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오는 9월 17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감리교도 중앙홀에서 공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
-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을 추진중인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씨는 160여명으로 이뤄진 악단이 9월 15일 런던에 도착해 17일 공연을 갖고 19일엔 영국 북동부의 소도시 미들즈브러에서 또 한차례 공연한다고 설명했다.

● 獨, 北에 300만 달러 간접 지원(7/9)

- 독일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의 과수 재배와 옥수수,감자의 종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독일의 비정부기구인 저먼 에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에 기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독일 외무부 산하 경제협력개발부의 홀거 일리 공보관은 “독일 정부는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정치적 체제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양자간 직접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 靑 “독도는 한국영토..분쟁대상 될 수 없다”(7/13)

- 청와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았음.
-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가진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음.

나. 기타

● 한·러 첫 정상회담..TSR-TKR연결 협력(7/9)

-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사업과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통과 등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경협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 양 정상은 이날 오후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윈저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극동 시베리아의 가스 개발·공급을 포함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는 물론 교역과 투자 증진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음.
-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등 6자 회담을 통한 북핵사태 대처에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 한·인니 정상, 에너지자원 협력 합의(7/9)

-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음.
- 회담에서 두 정상은 최근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고위 인사 교류 및 교역규모 증대 등에 대해 평가한 뒤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 한·멕시코 정상, FTA 조속체결 합의(7/8)

-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



통령은 8일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

- 두 정상은 양국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두차례 협상을 성공리에 개최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음. 또 양국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멕시코 항공노선 개설에 협력키로 했음.

● 한·브라질 정상, 에너지자원 협력확대 합의(7/8)

-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에서 루이스 이나시올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삿포로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호혜적 교역 및 투자관계 증진,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참고자료] <6자회담> 언론발표문 전문(7/12, 연합뉴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8. 7.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기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자료-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7/12/0511000000AKR20080712058800043.HTML>

 국제관계연구실 제공